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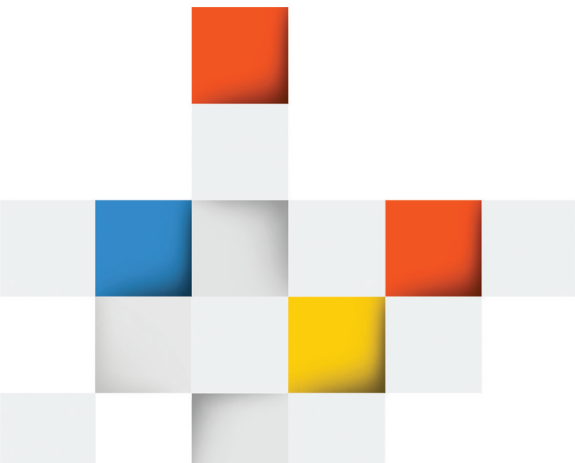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코로나19 이후 반등했던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다시 둔화했다.
- 소득불평등은 모든 연령대에서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 최근 30대 이하 소득비가 유의하게 상승하고 있고 최고학력층의 소득비가 감소하고 있다.
- 최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비 하락이 두드러진다.
- 배우자가 일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고 고소득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 코로나19 이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그 이전 기간 수준으로 돌아갔다.
-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소득 5분위에 따른 순자산 배율이 다시 떨어졌다.
- 코로나19 이후 반등했던 소비지출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정체됐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의 지출 비중이 늘어난 반면, 교육, 의류·신발, 가정용품 등은 비중이 줄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여기에서는 현재까

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소득계층, 연령집단, 그 외 가구주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공식 소득통계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했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까지이다(소득 기준 2011~2022년).<sup>1)</sup>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소비와 지출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수록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최근 연간 및 분기 자료를 비교하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소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서로 다른 기간의 수치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과 소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했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1)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회고식 조사이므로 2022년도 조사에서는 2021년도 소득과 2022년 3월 현재 자산과 부채에 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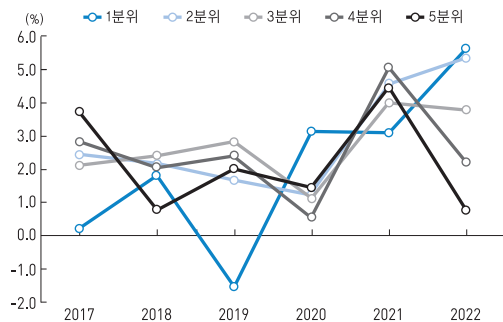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가구소득은 가구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여기에서는 가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sup>2)</sup>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했다.

최근 전체 가구의 실질시장소득 증가율을 보면 2017년 2.9%에서 2019년 2.0%로 차츰 낮아지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로 급락했다. 이후 2021년 4.5%로 반등했으나 2022년 다시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소득집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림 VI-1]은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의 평균 실질 시장소득이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이는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

게 변하는지 보여준다.<sup>4)</sup>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 시장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3.1%로 높아졌는데, 이는 2019년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 이후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과 재산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2분위 이상 가구의 2020년 실질 시장소득 증가율은 2019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각각 1.2%, 1.1%, 0.5%, 1.4%로 증가율이 둔화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 소득 3분위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2022년 다시 둔화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림 VI-1] 가구소득 5분위별 실질 시장소득 전년 대비 증감률, 2017-2022



-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 실질시장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임.  
 3)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표본의 균등화 소득을 기초로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했고, 가구 가중치는 균등화를 감안하면서 각 연도 기준으로 했다.

4) 소득분위별 가구구성이 매년 바뀌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 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2016년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VI-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놓고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했다. 소득비 산출에는 각 가구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했다.<sup>5)</sup> 1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016~ 2022년 평균 32.1%이고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02.3%이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각각 2016년 29.7%와 59.6%에서 2022년 34.0%와 64.2%로 개선됐다.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같은 기간 207.3%에서 196.2%로 하락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VI-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소득 배율을 제시했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을 함께 제시했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2016년 10.88배에서 상승하여 2019년 11.56배에 이른 이후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2022년 10.99배를 기록하여 최근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2016년 6.98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5.76배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2016년 이후 권역별 소득 5분위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두 권역간 1분위 소득격차가 5분위 소득격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면 비수도권은 낮아진 반면 수도권은 유지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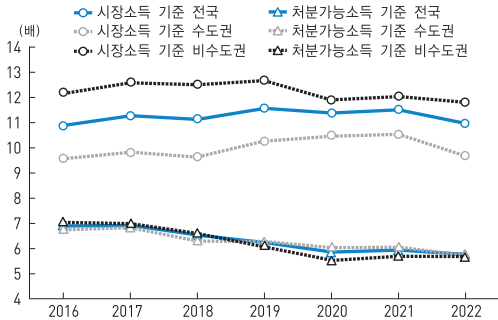
<표 VI-1> 가구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소득비, 2016-2022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6	29.7	59.6	85.7	117.6	207.3
2017	29.8	59.8	85.2	117.9	207.2
2018	31.1	60.8	86.1	118.4	203.6
2019	32.3	61.7	86.7	117.4	201.9
2020	34.2	62.5	86.9	116.6	199.8
2021	33.6	62.4	86.5	117.4	200.0
2022	34.0	64.2	88.0	117.4	196.2
2016-2022 평균	32.1	61.6	86.4	117.5	202.3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소득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3)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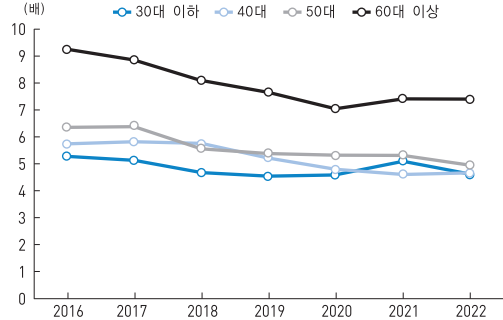
5)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하여 정의되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영된다.

[그림 VI-2] 소득 5분위배율, 2016-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3) 권역별 지표 계산은 각 권역 내 상대적 소득분위에 기초함.  
 4)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3] 가구주 연령별 소득비, 2016-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3) 연령대별 지표 계산은 각 연령 내 상대적 소득분위에 기초함.  
 4)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한편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두 권역 모두 유사하며 최근 하향 추세다. 이는 비수도권의 저소득층 평균 소득이 수도권보다 낮아 공적이전소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그림 VI-3]은 연령대별 소득 5분위배율을 세 후소득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2016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하향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율이 높았지만 2022년에 이르러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배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한 가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한편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2>는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을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6년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1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각각 해당 시점 소득분위 가구가 그다음 해에 어느 소득분위로 이동했는지 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두 시기 모두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들은 다음 해에 40% 이상이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고 1분위와 5분위는 약 20%의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해 양극단의 소득계층에서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21~2022년 기간을 2016~2017년 기간과 비교해 보면, 각 소득계층으로의 이동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중 고소득층에서의 이동성(23.3%)이 높아진 것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6-2017, 2021-2022

1) 2016-2017년 (%)

2017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잔류	이동
2016 1분위	74.5	18.4	5.0	1.8	0.2	74.5	25.4
2분위	18.8	50.5	23.1	6.6	1.1	50.5	49.6
3분위	4.8	19.4	49.5	22.7	3.6	49.5	50.5
4분위	2.3	6.8	19.4	54.7	16.8	54.7	45.3
5분위	1.1	1.5	3.9	13.9	79.6	79.6	20.4

2) 2021-2022년 (%)

202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잔류	이동
2021 1분위	76.6	17.1	3.9	1.6	0.8	76.6	23.4
2분위	18.4	52.7	21.5	6.0	1.5	52.7	47.4
3분위	5.0	21.4	49.8	21.6	2.2	49.8	50.2
4분위	1.5	6.4	20.5	56.4	15.1	56.4	43.5
5분위	0.8	1.5	3.3	14.6	79.8	79.8	20.2

주: 1) 2년 연속으로 자료가 존재하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기준 가구가중치를 사용함.  
 2)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6년 소득분위에서 2017년 소득분위로의 이동확률과 2021년 소득분위에서 2022년 소득분위로의 이동확률을 측정함.  
 3) 표 대각선에 위치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일 소득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대각선 위쪽과 아래쪽에 위치한 수치는 각각 상위 소득분위와 하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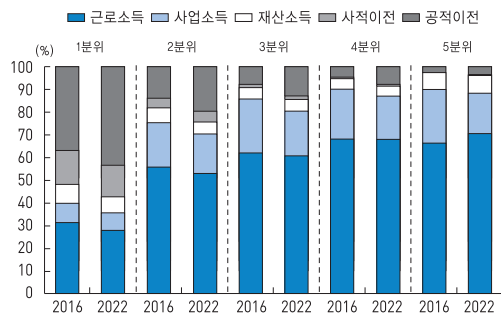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원천은 다양한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경상소득과 그 외의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

득은 다시 가족 간, 비영리단체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0%에서 2020년 62.9%로 떨어졌다가 2022년에 64.9%로 회복된 반면, 사업소득은 이 기간 19.4%에서 17.8%로 꾸준히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2019년 7.7%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2020년 9.8%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 9.2%로 다소 감소했다.

〔그림 VI-4〕에 제시된 2022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8.0%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8.0%

〔그림 VI-4〕 가구소득 5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6, 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3.



와 70.6%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22년에는 2016년에 비해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소득 비중은 줄어들었다. 한편, 3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꾸준히 증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 모두 줄어들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고령층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증가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따른 실업급여액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VI-5]의 2022년 기준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진다.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연령대 가구와 달리 20대 이하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87.6%에서 78.7%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6.4%에서 13.6%로 크게 높아져 청년층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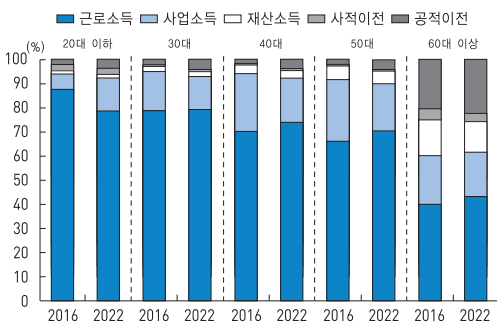
득이 불안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이는 이 기간 20대 이하 가구에서 창업을 통한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2016년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상당수가 은퇴 시점을 넘겨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구에 귀속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이다.<sup>7)</sup> 단순히 가구주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들의 소득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특성집단 간 맞벌이 가구 비율 및 1인가구 비율의 차이와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림 VI-6]은 2011~2022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연령집단별 소득격차는 점차 줄

[그림 VI-5]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구성, 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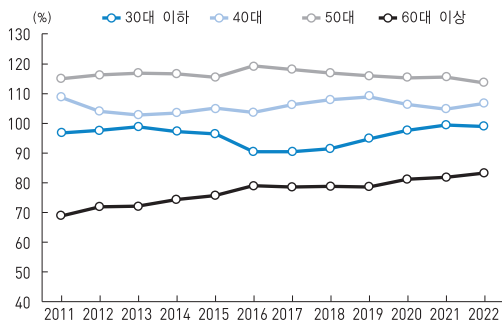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6) 2016년에 비해 2022년에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33%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 비중은 감소했고 3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은 17%로 유지됐다.  
 7) 경상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처분가능소득과 유사하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으며 60대 이상의 소득비는 평균 이하 수준이다. 최근 2016년에서 2022년 기간에 각 연령집단별 소득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30대 이하는 90.7%에서 99.2%로 유의하게 상승했으며 40대는 103.9%에서 106.9%로, 60대 이상은 79.2%에서 83.5%로 다소 완만하게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119.3%에서 113.9%로 하락했다.<sup>8)</sup>

[그림 VI-6] 가구주 연령별 소득비, 2011-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 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3)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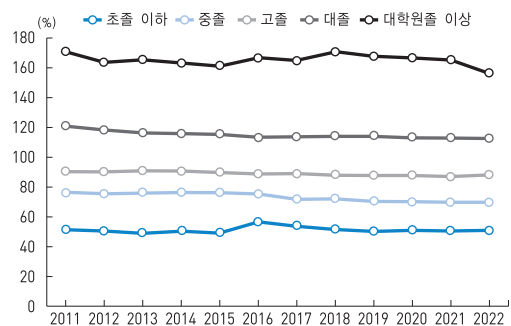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

8)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년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했으므로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VI-7]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저학력집단뿐만 아니라 고학력집단의 소득비도 하락하고 있다. 2016년과 2022년 사이에 초졸 이하 집단은 56.4%에서 51.0%로, 중졸 집단은 75.2%에서 69.7%로, 고졸 집단은 88.8%에서 88.1%로 꾸준히 낮아졌다. 대졸 집단의 소득비는 2016년 113.2%에서 2019년 114.2%로 상승하다가 2022년 112.5%로 하락했고,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2016년 166.3%에서 2018년 170.0%로 다소 상승하다가 2022년 156.3%로 다시 하락했다. 모든 집단의 소득비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인구구조 상 고소득 고학력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

[그림 VI-7]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학력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3) 2016년 소득 자료부터는 소득, 비소비지출 일부 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 있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전체 평균 소득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한편 학력집단 간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고졸 집단을 100으로 놓았을 때 초졸 이하의 학력집단은 2016년 63.5%에서 2022년 58.0%로, 중졸은 84.7%에서 79.2%로 하락했고 대졸은 127.5%에서 127.8%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같은 기간 187.3%에서 177.5%으로 하락했다. 이는 50대 최고학력층의 평균 소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VII-8-1]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는 직종 간 격차가 줄어들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까지 다시 격차가 커졌다. 코로나19 기간 관리직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전문직과 사무직은 다소 하락했다. 관리직 소득비를 100으로 놓았을 때 전문직은 92.2%에서 84.8%로, 사무직은 80.4%에서 73.0%로, 서비스·판매직은 60.5%에서 57.6%로, 기능·조작직은 60.6%에서 58.2%로, 단순노무직은 46.7%에서 42.6%로 모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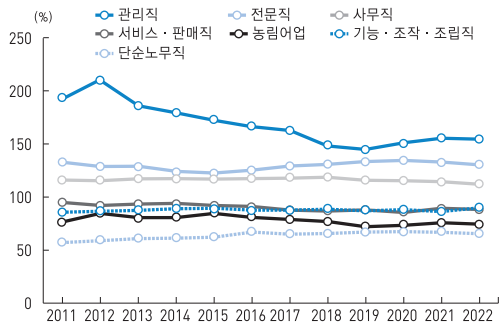
[그림 VII-8-2]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종사상지위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의 소득이 높은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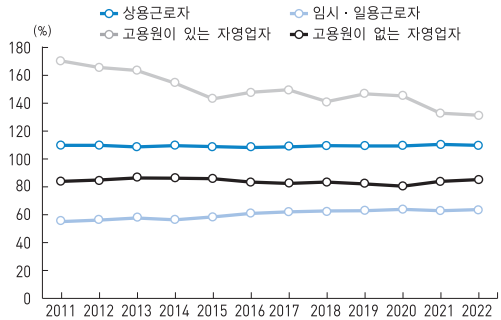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비가 147.5%에서 131.1%로 유의하게 하락한 반면, 나머지 종사상지위 집단의 소득비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 특히 2020년 이

[그림 VII-8] 가구주 직업 및 종사상지위별 소득비, 2011-2022

1) 직업별



2) 종사상지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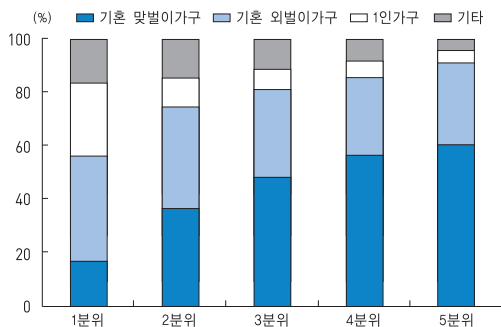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대상 가구 전체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직업별 또는 종사상지위별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3) 2016년 소득 자료부터는 소득, 비소비지출 일부 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2022년 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규제 등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기혼가정에 한정하여 볼 때 가구주와 배우자가 동시에 일하는 맞벌이 비율이 2017년 46.8%에서 2022년 53.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비율은 증가했다. 30대 이하 가구는 44.7%에서 66.3%로, 40대는 56.5%에서 62.2%로, 50대는 57.4%에서 65.3%로, 그리고 60대 이상도 31.0%에서 37.0%로 증가했다.

[그림 Ⅶ-9]은 전체 가구에 대해서 각 소득분위별로 혼인여부와 배우자 소득여부에 따른 가구유형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가구유형은 기혼 맞벌이 가구, 기혼 외벌이 가구, 1인가구, 그리고 기타(배우자가 없는 2인 이상 가구)

[그림 Ⅶ-9] 가구소득 5분위별 혼인 및 배우자 여부에 따른 가구유형 분포, 2022



주: 1)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종사상지위가 무직자, 가사, 학생이 아닌 경우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3.

로 구분했다. 고소득층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 2022년 소득 1분위의 맞벌이가구 비중은 16.6%인 반면 소득 5분위는 60.5%에 달한다. 2022년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균등화 소득 기준 1.26배 높는데, 2017년 1.27배에 비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1인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4년(2019~2022년)은 오히려 이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2019년 85.0%에서 2022년 78.5%로 감소했다. 이는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1인가구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 1인가구가 전 소득층으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같은 기간 모든 소득분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분위는 그 비중이 64.9%에서 69.1%로, 2분위는 28.0%에서 40.7%로, 3분위는 10.7%에서 19.4%로, 4분위는 4.4%에서 7.8%로, 그리고 5분위는 1.3%에서 2.8%로 증가했다.

2016년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6~2019년 기간에 20대 이하,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20대 이하,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은 각각 2019년



5.8%, 10.0%, 10.8%에서 2022년 9.2%, 16.7%, 13.1%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58.2%에서 45.7%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최근 혼인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16년 56.3%에서 등락을 하다가 2022년 64.6%로 증가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와 1인가구의 상위연령층 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2년 연령대별 1인가구의 소득비는 30대 이하 88.2%, 40대 86.6%, 50대 63.5%, 60대 이상 49.2%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 가구자산의 변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부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3%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0.2%로 증가세가 멈추었다. 2023년 3월 기준 전체 가구의 62.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9년 63.8%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아 2023년 1분위의 경우 31.2%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7.7%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24.9%와 44.9%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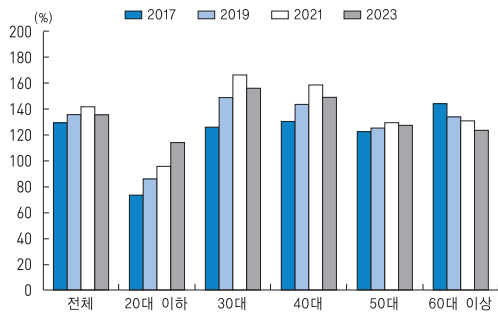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129.6%에서 2021년 142.4%까지 증가한 이후 하락하여 2023년 현재 135.8%에 이른다. 소득분위별로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는 134.3%에서 142.6%로 상승한 반면, 2분위는 150.1%에서 133.9%로, 3분위는 144.7%에서 138.2%로, 4분위는 148.3%에서 140.8%로, 5분위는 137.7%에서 132.3%로 2분위 이상에서 하락했다. 대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23년 18.6%로 2022년 17.9%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이는 2021년 말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23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은 20대 이하의 경우 58.4%로 낮은 편이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74.5%와 76.1%로 매우 높다. 다시 50대는 70.3%로 낮아지고 60대 이상에서는 45.8%로 더욱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에 따른 주택구입과 전월세보증금 마련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림 VI-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7~2023년 기간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대 이하, 30대, 40대에서 크게 상승했고, 50대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이 기간에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의 부채 증가율이 각각 96.7%와 63.5%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향후 청년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림 VI-10] 가구주 연령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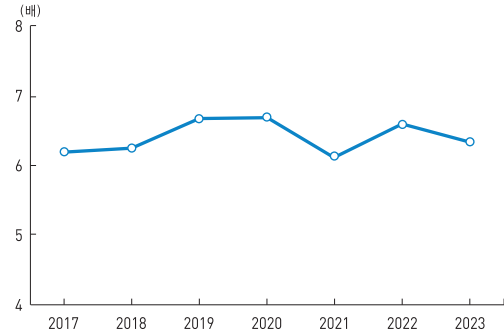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대비 부채 비율=총부채액:연간경상소득.  
 3) 소득은 전년도 말 기준이고, 자산은 당해 연도 3월 기준임.  
 4) 2021년 및 2023년 조사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부동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6년 동안 총 44.4%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소득 2분위 이상에서 일제히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그림 V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1분위 순자산 대비 소득 5분위 순자산 배율은 2017년 6.2배에서 2020년 6.7배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 등락 추이를 보이며 2023년 6.3배로 다소 하락했다. 2023년 전체 순자산의 7.0%는 소득 1분위 가구에서, 44.5%는 소득 5분위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림 VI-11] 소득 1분위 순자산 대비 소득 5분위 순자산 배율, 2017-2023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1~2023년 조사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급여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수치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순자산 배율의 등락추세는 부동산가격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7~2020년 기간에 소득 1분위의 부동산자산 가치는 11.0% 증가하여 5분위의 22.8%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1~2023년 기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부동산자산 가치의 변화는 순자산 배율의 등락추세와 대부분 일치한다.

###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비 및 비소비지출을 살펴해보았다.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가구의 지출패턴에 어떠한 변



화를 초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이후 각 연도 1분기의 실질소비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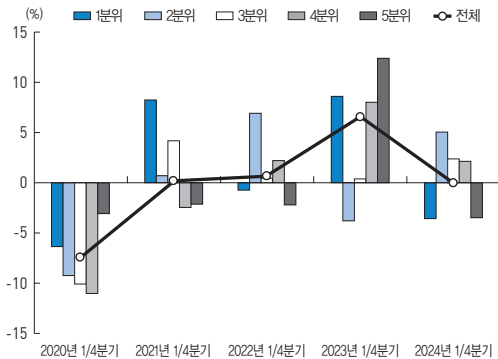
우선, 전체 가구의 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7.4% 급감한 후 2022년 1분기까지 완만하게 회복되다가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 1분기에는 6.6% 급등했다. 하지만 2024년 1분기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 증가율이 0.0%로 정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VI-12]를 보면 2020년에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소비가 각각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2021년 이후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 증가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소비 변동성이 높은 편이었고, 4분위와 5분위는 2023년이 되어서야 크게

반등한 후 2024년 다시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은 필수재 위주로 소비가 이뤄지며 정부 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고소득층은 대면 활동 활성화와 연계된 소비항목의 지출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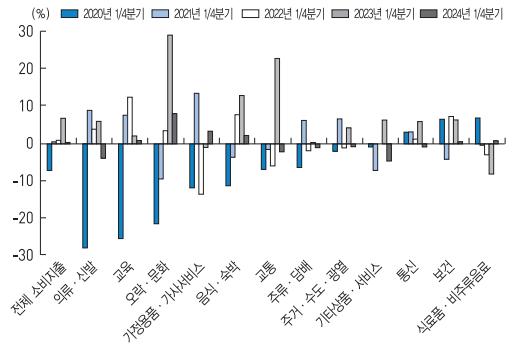
[그림 VI-13]에서는 전체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기간에 서비스와 관련된 의류·신발, 교육,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 교통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다가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반등하며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반면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통신 등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의 등락은 음식·숙박 소비와 반대로 움직여 항목 간 연관성을 볼 수 있다. 2024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대부분 항목의 소비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2] 가구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2024.1/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0년 기준 실질소비지출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1/4분기.

[그림 VI-13]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2024.1/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0년 기준 실질소비지출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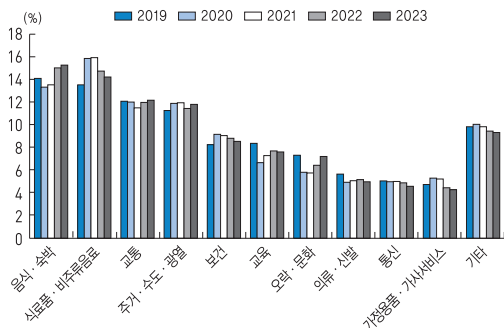
코로나19 전후로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했다. [그림 VI-14]는 연간 명목 자료를 이용하여 2019~2023년 기간에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9년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지출 순으로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등은 지출 비중이 하락했다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다시 회복했다. 이와는 반대로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코로나19 초기에 지출 비중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이처럼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과 대면 서비스 관련 품목들이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면,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의 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교육,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의 지출 비중은 줄었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교육, 교통, 의류·신발 등의 지출 비중이 감소했다가 회복한 반면, 음식료, 주거, 보건, 주류, 가정용품 등의 지출 비중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오락·문화의 경우 20대 이하, 음식·숙박의 경우 30대 이하에서 그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나머지 더 높은 연령층에서는 그 비중이 하락한 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 대비가 됐다. 이는 젊은 연령층이 외부 활동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식주 지출 비중은 2019년 30.4%에서 2021년 32.9%로 유의하게 증가했다가 2023년 31.0%로 다시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확인된다.

[그림 VI-14]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9-2023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기타는 '주류·담배', '기타상품·서비스'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가구 비소비지출의 변화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VI-3>을 보면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5%에서 2022년 18.9%로 다소 증가했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금과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비중의 합이 2016년



11.2%에서 2022년 12.6%로 증가했고, 부채 증가에 따른 지급이자도 같은 기간 3.1%에서 3.7%로 증가한 데 있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소득 대비 세금 및 과징금 비율)은 2022년 기준 2분위가 2.1%, 3분위가 2.7%, 4분위가 3.9%, 5분위가 9.8%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누진적으로 높다. 조세부담률은 2016년에서 2021년 기간에 4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해 누진율이 강화됐다.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비중 또한 4분위 소득계층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VI-3〉 가구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 2016, 2022

(%)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6년						
전체	17.5	5.6	5.6	1.9	1.3	3.1
1분위	13.3	1.9	4.0	2.1	1.6	3.7
2분위	14.6	2.1	5.2	2.2	1.4	3.7
3분위	15.6	2.6	6.0	2.0	1.3	3.7
4분위	15.6	3.2	6.2	1.8	1.2	3.2
5분위	20.0	8.8	5.4	1.8	1.2	2.7
2022년						
전체	18.9	6.2	6.4	2.1	0.6	3.7
1분위	11.9	1.8	3.6	2.3	0.7	3.6
2분위	14.8	2.1	5.6	2.7	0.6	3.8
3분위	15.9	2.7	6.4	2.3	0.6	3.9
4분위	17.4	3.9	6.9	2.1	0.6	3.9
5분위	22.3	9.8	6.6	1.8	0.7	3.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2년 가구소득 자료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그 이전 시계열 자료와의 직접 비교에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